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의미

北 핵 불능화 실천적 단계 돌입

靑, “한반도 비핵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 밝혀 군사적 긴장 완화 실질적 불가침 제도화 방안 제시”
김정은 서울 방문 관련 “동북아 지형 안보에서 중요”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는 실질적 불가침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선언에는 크게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

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는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 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했다. 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수석은 현재의 핵 물질 폐기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이 안 들어간 배경을 묻는 질문에서 “북미 대화에서 미래 핵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현재의 핵물질 폐기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대화를 하다보면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상징적

인 핵 시설이다.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는 앞으로 신규 핵물질 생산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라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 대화의 진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 간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과 배경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 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과 북한 양국이 동창리 핵 시설 폐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는지 묻자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미국 측과도 오랫동안 긴밀하게 협의 해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아마 향후

미국 정보쪽과 여러 라인을 통해 안보에 대한 고민들을 깊숙이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아울러 연내 추진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서울 방문 자체가 남북관계, 동북아 지형 안보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부분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구역 능라도 소재 북한 최대 규모 종합체육경기장인 ‘능라도5.1경기장’을 방문해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15만명 북한 주민에게 1~2분 가량 인사말을 했다. 방북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출발 예정인 백두산 일정에 대해 윤 수석은 “구체적인 일정을 두고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백두산에 가면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해 거기에서 바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향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남북, 동·서해 80km 완충수역 공동어로 설정

남북이 동·서해에 80km 완충수역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에도 합의해 평시에도 상호 위협을 감소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남북은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가운데 안호영 위원장이 상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등전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내 불법어로 차단,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공동 순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순찰대는 비무장선박으로 구성되고, 남북은 6·4합의서 내용을 기준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세울 전망이다. 이 밖에 남북은 북측 선박들의 해 주지향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중립수역이지만 현재는 접근이 제한돼 있다.정부는 남북간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민생탐방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 어려움 극복’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 종로 광장시장서 민생탐방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추석연휴를 앞둔 1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과 당 소속 의원등 3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광장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탐방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과일, 육류,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추석 물가동향을 살피고 시장 상인을 만나 체감 경기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추석맞이 민생탐방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여느 여름보다 폭염이 심했던 올해, 설상가상 경제 위기까지 겹쳐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도 감소하고 채소와 과일값은 물론 물가상승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경기침체가 지속화되는 가운데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 어려움에 빠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민주평화당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자. 전통시장이 살

아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인은 “영세업이 생활하는데 힘들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퇴직금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을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5인 미만의 영업장은 차등을 두는 등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울분 섞인 어조로 토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제난이 심해지면 영세업자부터 망하고, 못사는 분들부터 해고를 당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그런 분들을 뒷받침해주려 했지만,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등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업종별, 연령대별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말씀하신 의견들을 정부에 적극 촉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평화당은 공무원의 친구가 아닌 자영업자의 친구다.”라고 민심을 수렴했다. /김진성 기자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가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보유 한도를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자격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 위임했다. 김중석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에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며 “단 부대예건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제외되 정보통신업 비중 높아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농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신선한 우리 먹거리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우리 농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농협”

‘같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농협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유의 나라 무주

자연과 생명의 등불, 반딧불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농협무주군지부장 송혁
무주농업협동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업협동조합장 양승욱

무주반딧불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